

| 권두언 |

진통을 딛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회적 대화

박명준

본지 편집위원장

뜨거웠던 폭염의 시간이 가고 있다. 2018년 8월 말 현재,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시계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땀을 내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 그래도 열추 10월 중후반에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할 태세다.

경사노위 회의체를 꾸려가는 사무처의 활동은 지난 6월 중순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지만, 회의체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은 아직 모두 다 유효한 상태가 아니다.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신설 조항들은 3개월의 시간 안에 시행령을 완성한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대략 9월 13일경이다.

구성을 보자면, 일단 18인의 경사노위 멤버들 가운데 11명은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원장, 상임위원, 정부측 두 장관들, 경영계 대표 5인, 노동계 대표 중 2인(양대노동 위원장)이 그들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새롭게 결합하게 될 노동계측 3인과 공익위원 4인 등 총 7인은 누구로 될 지 아직 미정이라 같이 정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에 업종별위원회의 설치를 빼 놓을 수 없다. 주지하 듯이 새로운 법령에는 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즉 의무규정으로 언명해 둔 상태이다. 경사노위에서는 언제나 업종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어야 합법적인 상태라는 말이다.

알다시피 경사노위는 이른바 ‘트라이파티즘 플러스(Tripartism Plus) 체제’의 양상을 띤다. 참여 주체로 노사정을 대표하는 이들을 보다 확장시켜 구성해 간다는 말이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소위 미조직 취약층을 대변하여 그들을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본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계층별위원회’의 설치가 대표적이다. 참여할 대표체들을 어

떻게 조화롭게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가 의미있는 기능을 해 가도록 만들지 고심 속에 진지한 모색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은 아직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띄워지기 전, 그것을 대신하여 임시적인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시간이다. 지난 1월 말 발족을 통해 시작된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5월 말 최저임금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벌이면서 노동계가 참여를 중지하여 잠시 휴지기에 돌입했다가 약 1개월 후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에 참여를 결의하면서 재개되었다.

7월부터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대표자 회의에서 가장 우선에 두고 추진한 것은 직전 제3차 대표자회의(4.23 개최)에서 결의한 바, 그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4개의 사회적 대화체들을 발족시키는 일이었다. 그 결과 (i)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i)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iii)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iv)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모두 7월 중순에 발족했다. 이는 사실상 노동존중사회의 수립을 지향하는 현 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의 불참기는 조금 더 길어 2개월 정도 더 이어졌다. 4개의 의제별 위원회의 발족도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 한달 여 동안의 논의도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다 지난 8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로의 복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그 다음 주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도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추인하였다. 민주노총은 8월 22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8월 23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공식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활동을 재개하였다.

대표자회의 체제의 출범 이후 약 100일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안을 마련하자마자 진통에 빠진 사회적 대화가 약 100일 간의 불안정기를 거쳐 다시 온전한 모양새를 띠어 간 것이다. 다음 100일은 아마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해소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것을 공고화시켜 가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들 말하듯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 진통은 사회적 대화 주체들과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세력들에게 값진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대화 기구만 잘 만들고 그 내에서의 논의만 집중해 가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 대화는 그것이 지향하는 전체 정책결정시스템 하에서의 힘 있는 행위자들의 후원과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참여주체들 내부에서도 충분한 소통과 조율이 원활해야 가능한 거다. 이는 모두의 의식적 노력이 없이는 이를 수 없다.

진통을 딛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회적 대화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고 그간의 경과들을 가다듬으면서 이번호 <격월간 사회적 대화>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 보았다.

우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관련한 굵직한 소식들을 정리했다. 6~7월의 휴지기 동안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이 대표자회의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11에 수행한 바 있다. 일단 이 소식을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이후 7월에 출범한 4개의 의제별위원회들 각각의 면모를 스케치해 보았다. 이어서 손영우 전문위원이 대표자회의의 체제 하의 의제별위원회의의 구성과 기능 일반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회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현 시기 노동계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노중기 교수의 특별기고를 게재했다.

<기획대담> 코너에서는 우리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와 그것을 위해 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갈 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노동법 학자 5인이 참여를 했다.

<사회적 대화 논단>에서는 현 시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배경이슈이자 대상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주요한 정책 아젠다들을 다루면서 그것과 사회적 대화의 연계성에 대해서 논하는 기회를 갖았다. 조영철 교수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관계 그리고 그것과 사

회적 대화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 후속대책으로 필요한 조치들 및 그에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고견을 들려준다. 끝으로 김재진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 논쟁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정책적 의미와 적절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시리즈 기획좌담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서는 이른바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비정규,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체들의 책임있는 관계자들로부터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지면에 담아 보았다. 이어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모색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핵심관계자(조성주 협력관)로부터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사회적 대화의 현장〉 코너에서는 KB증권에서 이루어진 사회연대기금 출연결정, 이른바 ‘우분투’ 운동의 첫 결실을 소개하였고, 이어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버스업계 노사정의 노동시간 단축합의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전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과정과 그 최종결론을 담았다.

지난 7월 말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적 협의의 미래: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비교”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을 연 바 있다. 〈토론회 지상중계〉란에서는 이 행사의 이모저모를 스케치해 소개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 국제 동향〉으로 여느 호와 마찬가지로 유럽 주요국 노동동향을 정리했고, 특별히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손영우 박사의 최근 저서를 박제성 박사가 짧게 논평한 서평을 게재하였다.

유난히 폭염이 심했던 2018년의 여름도 천천히 저물어 간다. 새로운 성장전략과 사회비전

을 내세우고 출범한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이제 1년을 훌쩍 넘긴 시간을 보냈다. 허나 야심차게 내세운 사회적 대화의 비전은 솔직히 제대로 영글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도 사회적 대화의 토양이 척박함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 정도로도 풍성하다고 할 소식들이 담겨진 것 같다.

애초에 사회적 대화의 시계는 그 어떤 정치일정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 그 과정과정, 마디마디마다 참여주체들과 관계자들이 애정과 신뢰를 축적해 가면서 대화의 그릇을 잘 빚어가야 그나마 미래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압축성장의 신화 속에서 압축과 비약의 기회에 집착하지 말자. 사회적 대화야 말로 더욱 더 그러하다.

더 이상 일시적인 정치적 선택의 굴곡 속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에게 사회적 대화는 공동의 생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엄중한 책임의 문제다. 여기에 다 같이 승부를 걸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뜻을 모았을 때 미래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 정언명령으로 삼아 사회적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호에는 보다 역동적이고 알찬 소식으로 독자들과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 호 권두언을 마친다.

2018년 8월 24일
광화문에서